

문 5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합의추정 조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.
- ② 위 법에 의한 합의추정 요건으로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 이외에도 사업자들이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요구된다.
- ③ 위 법에 의한 추정의 대상은 공동행위의 합의일 뿐 그 부당성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.
- ⑤ 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행위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합의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.

문 6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도 제한되는 기업결합 유형에 속한다.
- ② 기업결합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③ 상법 제530조의2(회사의 분할·분할합병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④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단독효과 또는 공동행위의 가능성보다도 시장의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.
- ⑤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과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을 규정하고 있다.

문 7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가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하거나,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그 명령을 발하는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.

문 8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.
-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- ③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도 합산한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'시정명령'을 받은 사실의 공표'를 명할 수 있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로 가격인하명령을 할 수 있다.

문 9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차별적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- ①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차별적 취급의 유형으로는 가격차별, 거래조건차별,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, 집단적 차별 등이 있다.
-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있어서 계열회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만을 의미한다.
- ④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는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취급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.
- 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, 그 반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.

문 10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- ①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들에게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.
- ②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수직적 가격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다.
- ③ 제조업자 상호간 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경우 제조업자 상호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가격경쟁을 하려는 소속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.
- ⑤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최고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평가기준은 동일하다.

문 1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?

-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
-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- ③ 새로운 경쟁 사업자단체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- ④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
- ⑤ 가격의 결정행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

문 1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고의·과실이 없어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와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.
- ③ 합의에 의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, 이러한 경우에도 시정조치로 합의의 파기를 반드시 명하여야 한다.
-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문제가 된 계약 조항만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.
- ⑤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제에 위반한 경우 그 결의의 파기를 명하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다.

문 13. 아래의 사례에서 甲회사의 공급거절행위에 대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 여부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甲회사는 연간매출액이 1,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100%를 공급하고 있다. A 제품은 B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인데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비교적 용이하다. B 제품 시장에서는 甲회사가 58.4%의, 乙회사가 11.1%의 각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. 그런데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A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였다.

- ① 甲회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중 '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'에 해당될 수 있다.
- ② 甲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A 제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甲회사의 행위는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·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.
- ④ 甲회사는 A, B 제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므로 위 거래거절 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까지 추정된다.
- ⑤ 甲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.

문 14.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사업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집단분쟁조정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.
- ④ 병합되지 않은 동일의 피해자집단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조정결정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.
- ⑤ 집단분쟁조정에서 손해배상액은 평균피해액으로 산정한다.

문 15.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.
- ③ 소비자는 환경권은 갖지만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할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④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단체를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다.
- ⑤ 소비자는 책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
문 16.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비자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피해구제업무를 할 수 있다.
- ② 소비자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자율적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.
- ④ 국가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일정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문 17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다.
- ②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은 불문한다.
-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.
- ⑤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조합은 사업자가 될 수 없다.

문 18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계약내용의 삭제·수정을 명할 수 있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상관없이 행정적·추상적 통제를 할 수 있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청인가약관의 경우 당해 행정관청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더라도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문 19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약관은 일방 당사자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어야 한다.
- ② 구두에 의한 약정은 약관이 아니다.
- ③ 약관은 계약서, 규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.
- ④ 약관 이용의 고객은 상인이라도 무방하다.
- ⑤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은 그 형식상 약관이 될 수 없다.

문 20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들로 묶인 것은?

- ㄱ. 자동차보험약관상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조항
 ㄴ.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는 조항
 ㄷ. 단독주택 건설용지 분양공고상 “당첨 후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며 분양신청금은 본사에 귀속됩니다.”라는 조항
 ㄹ.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,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,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조항

- ① ㄱ, ㄷ, ㄹ ② ㄷ, ㄹ
- ③ ㄴ, ㄷ, ㄹ ④ ㄴ, ㄷ
- ⑤ ㄱ, ㄴ

문 21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할부매매는 소비자 신용거래의 일종이다.
- ② 할부매매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이다.
- ③ 할부매매는 대금의 전액을 향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매매와는 구별된다.
- ④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⑤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문 22. 甲은 결혼정보회사 乙에게(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) 3개월 3회 할부 방식에 의해 가입비 등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甲과 乙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과 乙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乙은 甲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할부가격과 계약금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고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甲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甲은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.
- ⑤ 乙이 甲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규정과 달리 한 약정은 무효이다.

문 23. 아래 문장의 (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방문판매,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기간은 법정 기산일로부터 (A) 이내이다.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철회권 행사기간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(B)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(C) 이내이다.

- | | A | B | C |
|---|-----|----|-----|
| ① | 7일 | 1월 | 14일 |
| ② | 7일 | 3월 | 30일 |
| ③ | 14일 | 2월 | 30일 |
| ④ | 14일 | 3월 | 30일 |
| ⑤ | 21일 | 2월 | 14일 |

문 24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잘못 서술한 것은?

- ① 방문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영업을 개시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⑤ 계속거래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.

문 25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소비자보호 규정에 위반한 자는?

- 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·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사업자
- ②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관련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이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
-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언제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
- ④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둔 사업자
- ⑤ 재화의 배송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배송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업자

이하 여백